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Right to Health News at a Glance

2013년 8월 4주차(2013.08.19-08.25)

### 요약(Summary)

#### 1.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척결위한 업무협약 관련

- 뒷북치는 건보공단-금감원, 개인정보보호 뒷전?(8/21)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공단 이사장도 나서...(8/24)

#### 2. 제주 영리병원 도입, 잠정 보류..."면밀한 검토 필요" (8/23)

#### ○ 기타 뉴스

- 기재부, 투자개방형 의원·약국도입 카드 만지작(8/19)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활동 '시동'(8/23)
- 보건의료노동자 60% 인력부족 토로, '질 저하' 원인 (8/21)
- 상급종합병원 '경영난', 토요진료·비상경영으로 돌파구 (8/22)
- 초음파 급여시 병원계 "3000억 이상 손실" (8/22)
- 서울대병원 적자경영?...노조 "규모경쟁 멈춰라" (8/23)
- 의협, "협동조합 조세감면, 불법 의료생협 조장" (8/23)
- 의료 5단체 "진료실 폭행방지법 조속히 마련" 촉구 (8/23)
- 국립대병원 다인병상 71% 확보...강원대 87% 최고 (8/23)
- 병원 근무 여성근로자 '임신순번제' (8/24)
- 병협, 세금감면 축소 정책 과장 추계...750명 구조조정 불가피 (8/24)
- "유통기한 위조" 웨일즈제약, 전 제품 강제회수 (8/21)
- 노바티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투약 중단 후 기능적 완치 평가하는 대규모 임상 시작 (8/21)
- "제약사 무리한 OTC 밀어내기, 가격 질서 혼란" (8/22)
- 국경없는의사회, 소말리아 모든 의료지원 활동 중단(8/19)
- 미즈메디병원, 의료관광객에 호텔·통신사·식단서비스 등 제공(8/20)
-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한 흡연 연구결과 발표된다(8/23)
- 휴가 막바지 '낙태수술 홍보' 기승(8/24)

## 1.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척결위한 업무협약 관련

### 1) 뒷북치는 건보공단-금감원, 개인정보보호 뒷전?(8/21)

- 건보공단과 금감원 실무자협의체간 첫 회의, 금감원 사정으로 9월초로 연기
- 사보노조, “시민단체가 우려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데 충분히 설명하고 그걸 협약 전에 협약내용에 넣었어야 했는데 논의를 아예 안했다”고 비판

건보공단이 금감원과의 보험사기 조사 공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일축해놓고 정작 이를 설득할 만한 근거 마련은 뒷전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공·사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건강보험부담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체결 소식이 공개된 직후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진영은 공조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거세게 제기하면서 금감원과 공조가 이뤄지는 구체적 방식을 기재한 정보, 업무협약의 이행을 위해 금감원과 공조를 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단체 진영을 설득할 만한 논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애시당초 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8월말 건보공단과 금감원 실무자협의체간 첫 회의가 예정됐는데 금감원 사정으로 9월초로 미뤄졌다"면서 "예정된 실무자협의체에서는 주로 시민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보공단의 회신도 의례적인 내용뿐이었다는 것이 이를 확인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민사회 진영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보공단 측 회신 내용도 의례적인 말뿐이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철칙으로 삼는다고 말하는 건보공단이 관련한 우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있다가 우려가 제기되고 나서야 실무자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의 직장보험노조와 사보노조 등 양대노조에서도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양대 노조는 최근 건보공단과 금감원 간 MOU와 관련해 4가지 원칙을 실무부서 측에 전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목적으로든 개인정보질병정보를 제공해선 안 되면 협력과정에서 이를 일탈한 정보 제공도 있어선 안 된다 ▲공보험인 건보공단의 정보가 민간보험의 활성화나 이익증대에 도구로 이용되선 안 된다 ▲협약체결 이후라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사항을 적극 수용해 재협약하거나 수용되지 않을 시 협약 파기해야 한다 ▲협약 체결 전 보건의료노동사회시민단체의 추진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현재 해당 협약이 이 중 네번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데서 상당한 우려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보노조 측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 측이 현재 뒷북치는 느낌이 있다. 모든 제도라는 건 수용성이 우선이고 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되고 이제서야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의 목적이 보험사기예방 및 부담청구 방지를 위한 것이라지만 금융위와는 달리 금감원의 성격이 민간보험의 대리인 역할로, 캐릭터 자체가 시민단체의 의심살 만한 캐릭터다"면서 "설령 현재 공단 실무진들은 히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금감원과의 공조 과정에서 우려 대목을 방어할 수 있다해도 향후 과정에서의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담당자가 교체되면 금감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개된 협약 내용상으로는 시민단체가 우려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데 충분히 설명하고 그걸 협약 전에 협약내용에 넣었어야 했는데 논의를 아예 안했다"고 비판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안했다는 게 우려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sup>1)</sup>

## 2)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공단 이사장도 나서...(8/24)

-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김종대 "오바마도 민관협력, 보험사기 방지"
- 시민단체 "여론몰이 말라"

보험사기 척결을 명분으로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김종대 이사장이 불씨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여론몰이'로 규정,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부방' 블로그를 통해 '보험사기와의 전쟁 선포한 오바마 정부'라는 주제로 시리즈 글을 연재하고 있다. 연재에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7월 건보공단과 금감원의 업무협약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해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현재 금감원과의 업무 협력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받고 있다. 더불어 과거 골자가 비슷한 입법 추진이 사회적 반대로 좌절됐음에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설득과정 없이 간편한 행정조치로 시행하는 것은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

김 이사장은 "민간보험사로의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으나 개인의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건보공단과 금감원의 공통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이 연재한 두 편의 글에서는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의료개혁법 시행을 통해 기관 간의 협력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민관협력까지 함으로써 보험사기 척결에 나서고 있음이 설명된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주정부, 의료보장본부(건강보험공단), 보건부 감사관실, 법무부 등 정부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합동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조정 기능을 확대,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정부·공공기관 간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민간으로까지 확대해 보건의료 사기에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 결론적으로 김 이사장은 오바마 정부가 의료개혁법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 '정부와 공공기관'에게 강화된 권한과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해 보다 적극적인 보험사기 적발이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뒤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 조치들의 효율성을 증대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 같은 김 이사장의 행보에 보건의료단체 측은 '여론몰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모 보건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현재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이 없이 금감원과의 공조가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출이 없다 해도 업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개연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당위성을 교묘히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민간보험사들이 자사 보험료 지출 줄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상황에서 이번 MOU 자체가 자본주의 원리구조상 말이 안 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 아니라 왜 민간기업이 해야 할 보험사기 문제까지 건보공단이 인력, 시간, 비용을 낭비하며 나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대목은 개인정보 유출에서 더 나아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확대, 궁극에는 의료민영화다"면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호, 복지 증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곳이지 민영보험사가 해야 할 노력까지 나눠서 할 곳이 아니다"고 강조했다.<sup>2)</sup>

## 2. 제주 영리병원 도입, 잠정 보류.. "면밀한 검토 필요" (8/23)

- 싼얼병원 사업계획의 승인 잠정 보류
- 복지부 "진료 받는 해외환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제주도가 요청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의 승인이 잠정 보류됐다.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싼얼병원은 최초로 설립 신청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으로 이번 사업계획 승인이 향후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정책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국제병원에서 진료 받는 해외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싼얼병원과 관련해서 크게 두가지 측면에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싼얼병원은 미용 성형을 주진료이므로 최근 성형수술 중 발생한 사망사고처럼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싼얼병원은 48병상, 4개 진료과목의 소형병원으로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제주도내 종합병원과의 진료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최근 한라병원과의 진료협력 MOU가 파기된 상황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싼얼병원의 설립주체인 (주)CSC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줄기세포 치료·연구를 시행하는 계획을 포함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국제병원의 특성상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이 요구됐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sup>3)</sup>

### 국내 정책

#### 1. 기재부, 투자개방형 의원·약국도입 카드 만지작(8/19)

기획재정부가 성과미흡과제로 분류된 보건의료분야 영업규제 완화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진두지휘할 조직을 구성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조정국 내에 관련 업무를 총괄할 국장급 심의관 자리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이호승 부이사관을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심의관에 임명했다. 이호승 심의관은 정책조정국 내 기존 서비스경제과를 중심으로 하는 팀을 이끌며 각종 서비스 산업 난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장급 심의관을 새로 배치해 의견이 분분한 서비스 산업 정책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 새로운 조직과 인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제시하고 있는 성과 미흡과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허용 ▲보건의료분야 영업규제 완화(의료법인 합병, 법인약국 도입) 등이다.

결국 하반기에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이 어떤 식으로든 추진된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소지가 낮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갈등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병행해 가며 추진하기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sup>4)</sup>

##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활동 '시동'(8/23)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및 소득 파악 여건, 외국의 보험료 부과체계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여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여건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현웅 박사가, '대만, 독일,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사례분석'은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기획단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로 구성, 지난달 25일 발족됐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의료 산업

#### 1. 보건의료노동자 60% 인력부족 토로, '질 저하' 원인 (8/21)

보건의료노동자의 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의 '질 저하'와도 관계가 깊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3년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합원 4만 2,463명 중 절반이 넘는 2만 2,233명(52.3%)이 참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60.7%가 현재 병원사업장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인력부족률은 무려 23.2%(현재 17.8명이 일하는 부서에 3.2명의 인력충원이 필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력부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71.77% (65.1점 : 100점 기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에 이르러 사태의 심각함이 드러났다.

또한 "인력부족 때문에 환자들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61.52%(59.4점), "의료접근성이 약화됐다"는 의견이 61.23%(58.1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력부족으로 의료사고에 노출되었거나 그런 사실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의견은 46.68%(51.1점), "인력부족으로 병상을 축소하거나 폐쇄한 경험이 있다"는 의견도 29.34%(37.5점)이나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병원사업장의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과잉상태인 의료기관수와 고가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CT, MRI, PRT 등 고가 의료장비를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인구 1천명당 병상수가 8.95개로 OECD 평균 5.34개 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 인구 1천명당 간호사는 2.37명으로서 OECD 평균 6.74명의 1/3 수준이었는데, 이는 병원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는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달리 외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병원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구 1000명당 독일은 15명, 프랑스는 19.3명, 영국은 23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력은 4.3명 뿐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사업장의 심각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건

의료산업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로서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일·가정 양립,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sup>

## 2. 상급종합병원 '경영난', 토요일료·비상경영으로 돌파구 (8/22)

상급종합병원들조차도 경영난에 허덕이자, 토요일료 확대와 함께 비상경영체제가 하나의 돌파구로 부상했다. 이들 병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환자감소 추세와 저수가 체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토요일료를 확대하는 개원가부터 상급종합병원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이는 경영난을 돌파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삼성서울병원은 8월31일부터 토요일료를 전면 실시한다. 삼성서울병원의 토요일료는 전 진료과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내외과는 물론, 암병원, 심장혈관센터 등 병원내 거의 모든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개설된다. 또한 토요일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종 영상검사 및 혈액검사는 물론 초음파검사, MRI, CT 등 대부분의 검사도 적정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천성모병원도 마찬가지이다. 부천성모병원은 8월 현재 내과, 외과를 포함한 21개과에 한정해 토요일료를 시행해왔으나 9월부터는 내분비내과, 혈액종양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포함, 30개 진료과가 모두 토요일료를 전면 실시한다.

최근 대학병원들이 토요일료를 전면 확대 실시한 것에는 환자들의 요구 및 검사 대기시간 단축이라는 효율성 증대도 있지만, 토요일료를 통해 그나마 줄어들었던 수익을 메우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비슷하게 최근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실천결의대회를 통해 경영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의료이익이 48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 6월말까지 3백여억원의 의료이익 손실이 발생해, 현재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약 6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각 부서별 예산절감방안 마련 및 병상이용률 제고 등을 통한 수익증대방안을 강구하기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그동안 언급됐던 경영난의 여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이던 환자 수 감소현상은 올해 1분기 까지 이어지고 있고, 환자수가 줄어들어도 요양기관 관리나 인건비 등의 지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기관들의 경영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빅5'에 포함되는 대형병원들은 국세청 공시자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11억원), 연세의료원(-66억원), 가톨릭중앙의료원(-116억원), 서울대병원(-287억원) 등 지난해 심각한 적자가 드러났다. 이중 서울아산병원만 유일하게 70억원 흑자였다고 나와있지만, 이조차도 상가임대와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으로 인한 것이지 수술·진료 등에 따른 의료수익은 제자리였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제 수도권 내 대학병원들 사이에서는 토요일료가 새로운 일이 아니게 돼버렸다. 빅5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까지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나선 마당에 이러한 태도변화는 앞으로 타 병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했다.<sup>6)</sup>

## 3. 초음파 급여시 병원계 "3000억 이상 손실" (8/22)

초음파 급여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병원들이 수가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에 받고 있는 비용 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대형병원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정부의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

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병원들로서는 생존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각종 통계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주요 대학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음파검사 급여화는 또 다른 경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2011년 의료순이익률은 -0.6%로, 진료를 통해 수입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불황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수익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의료수익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초음파까지 관행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급여화 될 경우 병원경영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걱정이다. 실제 병협의 시뮬레이션 결과 관행수가 대비 50% 미만 수준에서 급여화될 경우 병원들의 손실액이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병협은 급여화 이후 행위량 증가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중증질환자에 한해 시행되는 만큼 행위량 증가로는 이어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병협 관계자는 “초음파 급여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부담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관행수가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수가 결정돼야 병원도 살고 환자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sup>7)</sup>

#### 4. 서울대병원 적자경영?...노조 "규모경쟁 멈춰라" (8/23)

서울대병원(원장 오병희)이 올해 600억원 적자를 예상하면서 비상경영 결의대회를 열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은 21일 비상경영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12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올해도 적자경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 노조 측은 "회계상 비용으로 잡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두 항목만을 감안하더라도 서울대병원은 2009년도 318억원 흑자, 2010년 485억원 흑자, 2011년도 391억원 흑자, 2012년도 108억원 흑자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수 천억원을 들여 암병원 등 병원확장 공사를 진행, 노동자의 노동강도만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적자가 예상된다면 진료재료 절감, 시간외 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수천억 공사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병원 경영진은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병상과 외래 확대 공사를 계속하기로 다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비상경영은 모든 면에서 상식을 벗어난다"며 "당장 이러한 비상식적인 경영 행태를 철회하고, 규모의 경쟁이라는 폭주기관차에서 내려 서울대병원의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8)</sup>

#### 5. 의협, "협동조합 조세감면, 불법 의료생협 조장" (8/23)

협동조합에 조세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생협의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에 의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마련한 반대 의견서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의 경우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생활협에 대한 방지책 마련 없이 세제 지원 등 특례 규정을 신설할 경우 오히려 불법적인 의료생활협을 국가가 지원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의 경우도 설립요건 등이 강화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의료생활협 의료기관과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탈법적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기관을 퇴출시키고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9)</sup>

## 6. 의료 5단체 "진료실 폭행방지법 조속히 마련" 촉구 (8/23)

의료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가 진료환경을 위협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진료환경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공론화해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실 폭행에 많이 노출된 응급의학회에서는 야간 응급실 경찰 배치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기도 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 의사협회(한의협), 대한간호협회(간협) 등 5개 의료단체는 '환자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5개 단체는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또 5개 단체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경찰과 검찰이 엄격히 준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 이계용 상근부회장은 "오늘 5개 의료단체가 요구한 사항이 반드시 관철돼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sup>10)</sup>

## 7. 국립대병원 다인병상 71% 확보...강원대 87% 최고 (8/23)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문제가 재난적 비급여 의료비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들은 5인 이상 다인병상을 평균 71% 가량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대병원은 선택진료비로 인한 환자 과다부담을 막기 위해 대부분 진료의사 성과급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22일 '교육부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병원 3곳을 제외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의 평균 다인병상 확보율은 70.95%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최소 확보비율 70%를 근소하게 웃도는 수치다.

다인병상 확보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강원대병원으로, 올 3월 기준 533병상 중 464병상이 다인병상이었다. 전체 병상의 87%를 다인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제주대병원이 76%로 뒤를 이었으며, 전북대병원 74%, 경상대병원 73.2%, 부산대 71.5% 등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또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70%로 평균 수준이었고,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각각 67%과 64.1%로 평균을 밑돌았다. 다인병상 확보율이 가장 낮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56.7%에 불과했다. 이는 1960년 병원 설립 당시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1~2인실 위주로 설계한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탓으로, 개보수를 거쳐 다인병상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다.

국립대병원들은 병실과 함께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도 성과급 상한제를 운영하면서 점차 줄여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대의 경우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진료의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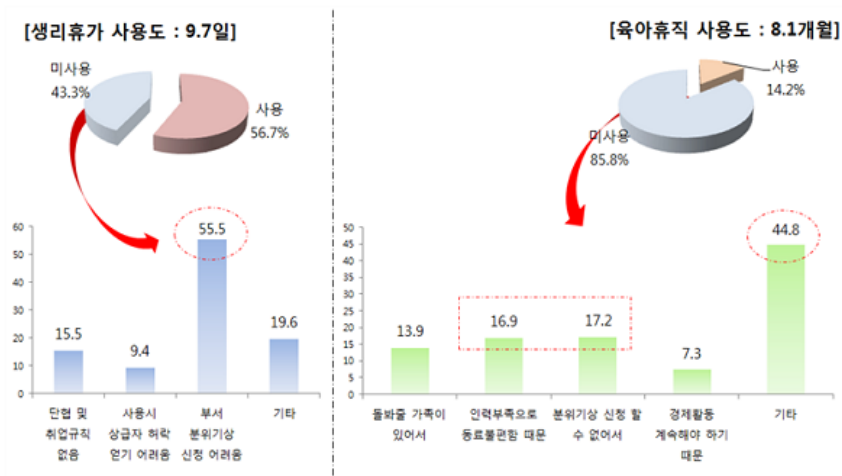
의 선택진료 성과급상한제를 월 350만원으로 설정, 가장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월 600만원으로 기준을 설정해 선택진료량을 제한했다. 서울대병원은 올해부터 진료하지 않는 기초교수들에 대한 관련 수당 지급을 금지시켰다.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수당을 진료수당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즉, 선택진료 수익에 비례하지 않고 의사 개개인 진료수익에 비례해 지급하고 있다.<sup>11)</sup>

## 8. 병원 근무 여성근로자 '임신순번제' (8/24)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인력부족, 폭언·폭행·성희롱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권리' 역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에 앞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2만 22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 부터 5월 10일까지 근무환경을 설문조사한 4번째 결과물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병원 근로자들의 모성보호와 건강권을 위한 육아휴직 및 생리휴가 사용 비율이 낮았고 권리 행사를 하는 행위에 앞서 사업장 분위기에 따라 신청에서부터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14.2%로 조사됐으며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8.1개월로 밝혀졌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병원 분위기상 신청하지 못함'이 17.2%, '현장 인력부족으로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기 때문'이 16.9%로 조사됐다.

또한 생리휴가 사용비율은 전체 56.7%로 나타났으며, 생리휴가 미사용자 중 55.5%가 '부서 분위기상 신청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 가입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임신 순번을 정하는 '임신순번제'라는 상황이 실제 임상에서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간호인력의 경우 임신순번제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18%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원치 않는 피임을 한다고 답변한 경우도 13.7%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신순번제는 대부분 부서장 지시하에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경우 근무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무스트레스 증가로 타 부서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같이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장인 보건의료산업에서 모성보호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보충,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시정 등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sup>12)</sup>

## 9. 병협, 세금감면 축소 정책 파장 추계...750명 구조조정 불가피 (8/24)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로 일선 병원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의 파장에 대한 추계치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수 백억원의 세금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방세 감면 축소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315억원의 담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타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다.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부담을 위한 이 세금은 직원 급여총액의 0.005%를 사업주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의료기관은 이 세금을 감면 받았지만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종업원수가 많은 대형병원들의 경우 담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병원협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315억원의 추가 과세액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액이 무려 300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 폐지시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대학병원들은 750여 명의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계됐다. 병협에 따르면 1인 당 인건비 4000만원을 가정할 때 3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감면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750명의 일자리를 축소해야 한다.

병협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 폐지는 대학병원의 의료인력 채용 여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의료의 경우 산업 대비 인건비 비중이 월등히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제조업의 인건비 비중이 9.4%, 건설업 17.6%, 도소매업 26.5%, 숙박업 27.2% 등인데 반해 의료업의 경우 44.7%에 달하는 실정이다.

병원협회는 정부기관에 보낸 건의문에서 “병원의 공공성, 교육기능, 고용유발 등 사회적 역할과 조세부담 능력을 고려해 최소한 현행 감면 혜택이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sup>13)</sup>

### 약계 뉴스

#### 1. "유통기한 위조" 웨일즈제약, 전 제품 강제회수 (8/21)

한국웨일즈제약의 모든 제품에 대한 강제회수 조치가 내려져 주목되고 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웨일즈제약의 900여 품목에 대한 강제회수 조치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최근 진행한 한국웨일즈제약의 200여 품목에 대한 압수수사 결과 유통기한을 조작해 의약품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한 뒤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웨일즈제약의 모든 제품에 대한 강제회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한국웨일즈제약이 허가받은 375품목 이외에도 허가취하된 품목 중에서도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900여 품목 전체를 회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아직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된 품목 뿐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허가취하 품목을 포함해 900여 품목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sup>14)</sup>

## 2. 노바티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투약 중단 후 기능적 완치 평가하는 대규모 임상 시작 (8/21)

한국노바티스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투약 중단 후 기능적 완치가능성을 평가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능적 완치란 지속적인 투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유전자 반응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측은 “타시그나 임상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최소 MR 4.5 이상의 완전 유전자 반응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환자의 경우 만성골수성백혈병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완전 유전자 반응에 도달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이번 투약 중단 연구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고, 임상도 이 기준을 도달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투약 중단을 권고하고 있는 표준 치료 지침은 없으며, 고도의 정밀한 유전자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만 투약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투약을 중단한 환자들의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재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국제 표준의 유전자 분석(IS RT-Q-PCR)이 정기적으로 자주 실시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총 8건의 투약 중단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치료 중단 프로젝트는 총 25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0개 이상 국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이 중 1000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투약을 중단하게 된다.<sup>15)</sup>

## 3. "제약사 무리한 OTC 밀어넣기, 가격 질서 혼란" (8/22)

제약사들의 무리한 OTC 경쟁을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각 제약사들이 OTC 시장 장악을 위해 약국에 밀어넣기식 영업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OTC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 약국에 다량 구입을 유도해 이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실적에 급급한 일부 제약사들이 '인센티브'까지 내걸며 밀어넣기 영업을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제약사들의 이같은 가격 정책이 OTC 시장 가격을 흐리고 있다는데 있다. 도매업계는 약국과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도매업체간 경쟁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제약사가 어느정도의 적정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적정 가격을 책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도매업체들이 사입가 미만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약국들의 난매나 과열 경쟁은 물론 신뢰도 하락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약업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도매업계 중견관리자 모임인 도우회도 21일 해당 사항을 논의해 제약사에 건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sup>16)</sup>

## 기타 뉴스

### 1. 국경없는의사회, 소말리아 모든 의료지원 활동 중단(8/19)

1991년 이래 소말리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 MSF)는 14일 소말리아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살해, 폭행 및 납치를 소말리아의 무장 단체와 지역 지도층이 지원, 용인, 혹은 묵과함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인도적인 의료 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협상했던 해당 관계자들이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가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용인하는 역할을 해 왔다. 주로 소말리아 중남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이들의 행위와 용인되어 온 상황의 결과로 수십만의 소말리아 민간인이 인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회장인 우니 카루나카라(Unni Karunakara) 박사는 "인도주의 지원 활동가를 살해, 공격, 납치한 무장단체들과 이들의 활동을 용인해준 지역 지도층들은 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말하며 "소말리아에서 활동가들이 상황과 타협하면서 소말리아 국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엔 위험이 크다는 판단아래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2명이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으나 유죄를 받은 살인자가 곧이어 조기 석방되었다. 또한 케냐의 다담(Dadaab) 난민캠프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2명이 납치된 후 소말리아 남중부 지역에서 21개월 동안 억류되다 지난 달 석방됐다. 이 두 사건은 여러 극단적인 침해 사건 중 최근에 일어난 사례에 불과하다. 1991년 이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14명이 살해되었고, 활동가, 앰블런스 차량, 그리고 의료 시설은 수 십 차례나 공격을 당했다.<sup>17)</sup>

## 2. 미즈메디병원, 의료관광객에 호텔·통신사·식당서비스 등 제공(8/20)

미즈메디병원이 장기 체류형 의료관광객을 위해 진료와 더불어 호텔, 통신사, 외식업체 등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 호응을 얻고 있다.

미즈메디병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해외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2800여 명의 해외 환자가 방문했다. 그 중 약 80%가 불임치료 및 시험관아기 기술을 위해 내원한 경우다.

작년 한 해 미즈메디병원을 찾은 해외환자들이 방문한 진료과는 산부인과(79%), 비뇨기과(8%), 종합검진(2%) 순으로 많았고, 국가별로는 러시아 및 CIS국가(76%), 몽골(8%) 순이었다.

불임치료의 경우 최소 3주에서 길게는 4주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며 통원치료를 진료 받는 장기 체류 유형이 대다수다. 이에 따라 미즈메디병원은 숙박과 식사, 휴대폰 대여와 같은 비의료서비스를 강화했다.<sup>18)</sup>

## 3.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한 흡연 연구결과 발표된다(8/23)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를 27일 건보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한국인 130만명 19년 추적한 아시아 최대 규모 역학연구다. 이날 발제는 지선하 연세대 교수가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 대구가톨릭대 박순우 교수, 보건복지부 송명준 사무관,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sup>19)</sup>

## 4. 휴가 막바지 '낙태수술 홍보' 기승(8/24)

최근 서로 다른 법원의 판결로 인해 낙태에 대한 처벌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법으로는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에서 정작 낙태수술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법에 대한 판단도 엇갈리는 가운데, 여름철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낙태수술을 홍보하는 검은 손들이 속속들이 인터넷 상에서 발견되고 있었다.

지난 6월26일, 대전지방법원은 낙태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의사들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의사 4명은 2008년부터 많게는 140여명의 부녀자들에게 낙태수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당시 법원은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 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달랐다. 지난 8월9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낙태수술을 한 안씨(84년생)에게 벌금 200만원, 의사 손씨에게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낙태행위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손씨가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서도 소홀했던 점은 문제가 된다"고 해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유전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인척 간 임신 ▲임신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의사 역시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회분위기상 낙태가 용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산부인과들의 '검은 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개원 산부인과들의 검은 수법은 간단했다.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것. 메디파나뉴스가 인터넷에 '낙태 수술이 가능한 곳'을 검색하자 수많은 정보가 나열됐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 모두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직접 호객행위에 나선 일부 병원이 있는가하면, 낙태수술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알선해주는 브로커들도 존재했다.

특히 여름휴가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러한 '검은 마케팅'은 더욱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었다. 낙태수술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의 문제는 현재 국내의 경우 낙태 수술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보니, 정해진 가격도 없고 만약 부작용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의 청구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법원마다 낙태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가 된다. 낙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하루빨리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이 내려져야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그는 "낙태수술을 막고 싶다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고 방임해준다면 법은 법이 아니게 된다"고 덧붙였다.<sup>20)</sup>

- 1) '뒷북치는 건보공단-금감원, 개인정보보호 뒷전?', 2013.8.21., <메디파나뉴스>
- 2)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공단 이사장도 나서...', 2013.8.24., <메디파나뉴스>
- 3) '제주 영리병원 도입, 잠정 보류...'면밀한 검토 필요'', 2013.8.23., <메디파나뉴스>
- 4) '기재부, 투자개방형 의원·약국도입 카드 만지작', 2013.8.19., <데일리팜>
- 5) '보건의료노동자 60% 인력부족 토로, '질 저하' 원인', 2013.8.21., <메디파나뉴스>
- 6) '상급종병 '경영난', 토요일료·비상경영으로 돌파구', 2013.8.22., <메디파나뉴스>
- 7) '초음파 급여성 병원계 "3000억 이상 손실"', 2013.8.22., <메디파나뉴스>
- 8) '서울대병원 적자경영?...노조 "규모경쟁 멈춰라"', 2013.8.23., <데일리팜>
- 9) '궤 "협동조합 조세감면, 불법 의료생협 조장"', 2013.8.23., <데일리메디>
- 10) '의료 5단체 "진료실 폭행방지법 조속히 마련" 촉구', 2013.8.23., <메디파나뉴스>
- 11) '국립대병원 다인병상 71% 확보...강원대 87% 최고', 2013.8.23., <데일리팜>
- 12) '병원 근무 여성근로자 '임신순번제'', 2013.8.24., <데일리메디>
- 13) '병원 지방세 폭탄...750명 구조조정 불가피', 2013.8.24., <데일리메디>

- 14) "유통기한 위조" 웨일즈제약, 전 제품 강제회수', 2013.8.22., <메디파나뉴스>
- 15) '백혈병 약 끊고 완치 가능해질까?', 2013.8.21., <헬스코리아뉴스>
- 16) "제약사 무리한 OTC 밀어넣기, 가격 질서 혼란", 2013.8.22., <메디파나뉴스>
- 17) '국경없는의사회, 소말리아 모든 의료지원 활동 중단', 2013.8.19., <메디파나뉴스>
- 18) '미즈메디병원, 해외환자 맞춤 서비스 '호응'', 2013.8.20., <데일리메디>
- 19)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한 흡연 연구결과 발표된다', 2013.8.23., <메디파나뉴스>
- 20) '휴가 막바지 '낙태수술 홍보' 기승, 불완전한 법때문?', 2013.8.24., <메디파나뉴스>